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7

July 2006

| 이달의 이슈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

송 용 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 경제포커스 |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최 경 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한국기술평가의 현황

양 종 우(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자치구경제이슈 |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 유 근(영등포구청 생활복지국장)

| 경제동향 |

경기/고용/금융/부동산

| 부록 |

통계표

서울경제

2006.07

차 례

이달의 이슈	3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 송용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제포커스	9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최경규(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26	한국기술평가의 현황 양동우(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자치구경제이슈	45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조유근(영등포구청 생활복지국장)
경제동향	55	요 약
	56	경 기
	66	고 용
	76	금 융
	85	부동산
부록	95	통계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



송용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yongilsong@kist.re.kr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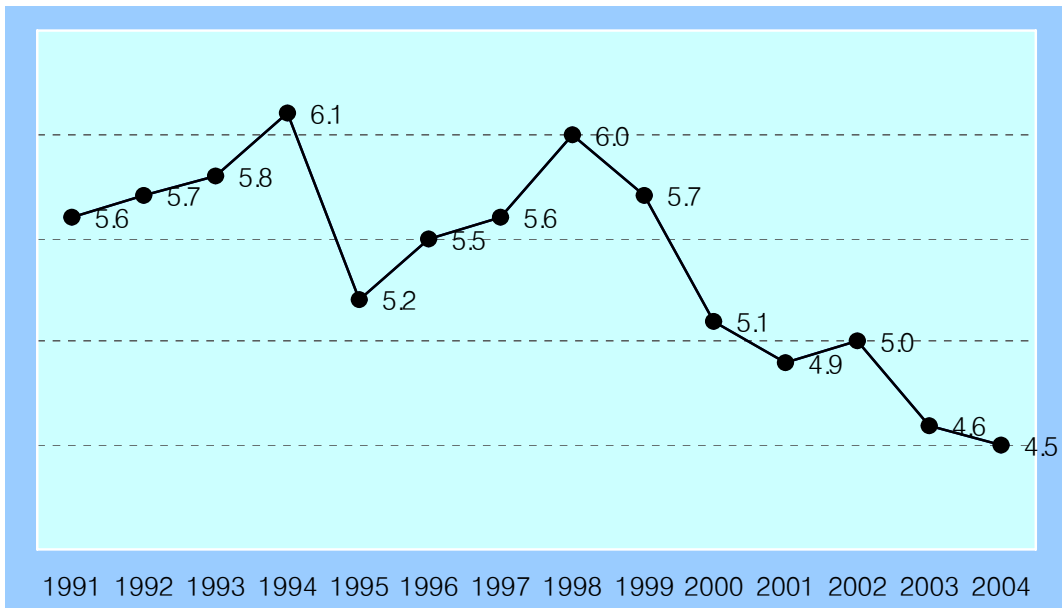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부의 진단에 따른 고강도의 기업 구조조정, 산업 개편 및 첨단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제구조의 질곡을 경험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혁신형 기업과 전통제조업체 사이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혁신이 없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세계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격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2005년 중소기업청의 통계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는 전체 사업체 수의 99.8%, 고용자 수의 87.0%, 생산액의 50.6%를 차지하며 산업 구조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998년 6.0%의 이윤율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2004년에는 4.5%까지 추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1> 참조). 반면, 동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뉴욕주립대학교(비팔로) 경영학 석·박사(경영전략 전공), 연세대학교 경제학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정책팀장(現), 뉴욕주립대학교(비팔로) 연구교수, 뉴욕주립대학교(프레도니아) 조교수
- JETM, Technovation, Scientometrics, Decision Support Syste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기술혁신연구 등에 기술경영, 전략경영, 경영과학 및 MIS 분야 논문 다수 발표

기간 제조업 부문 대기업의 이윤율은 6.5%에서 9.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설비투자도 2004년 4조 7천억 원으로 IMF 이전수준(1996년 6조 2천억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위기 이래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중소기업체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격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치는 중소기업 몰락의 위기상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림 1> 제조업부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윤율 추이

자료: 중소기업 협동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정부의 대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방안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즉,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기업, 경영혁신기업 등 기술 및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시각의 골자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7.7)」을 발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집중육성 및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의 활

력 회복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3만개 육성한다는 계획을 골간으로 중소기업 부활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32만여 개의 10% 수준으로 OECD의 평균치에 육박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후보군으로 대상 중소기업을 분류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업화로부터 성장 및 발전 사이클 전체에 대한 기술, 인력, 자금, 수출 및 판로개척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혁신친화적 제도개선 및 예산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06년 한 해 동안 창업초기자금 지원 5천 3백억 원, 기술창업 보증 2조 9천억 원, 기술개발사업화 430억 원 등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인력지원으로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사업(100억 원, 2,500명 지원), 중소기업 석박사 고용인력 지원사업, 기술경영인력 배출사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인력 육성 및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 산학협력연구소 사업, 전략적 R&D 집중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이다.

최근의 성과를 보면, 정부의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된 2005년 이후 혁신형 중소기업 수가 대폭 증가하여 2003년 8,500여개에서 2006년 12,700여개로 확대되었다. 이 중 특히 이노비즈 기업의 증가추이는 매우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2008년까지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지정의 목표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56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표 1> Inno-Biz 지정현황

(단위: 개)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4	2006.5	2006.6	2006.7
신규지정 업체수	1,090	766	519	570	808	420	581	1,002	1,449
지정취소 업체수	-	-	-	183	116	-	-	-	-
현재기업 수(누계)	1,090	1,856	2,375	2,762	3,454	3,874	4,035	4,456	4,903

자료: 중소기업청 연도별 통계

<표 2>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시 파급효과

분야	고용	매출	GDP 비중	부가가치
2005년	40만명	108조 원	1.8%	13조 원
2008년 (예상)	85만명	275조 원	6.7%	56조 원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06.5.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벤처신화의 형성과 몰락을 지켜본 우리로서는 정부가 행여 정책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우선,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 육성’ 정책목표는 자칫 사업의 초점을 양적 성장에 두게 되어 대규모 질적 부실화라는 벤처몰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기준이 완전히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위한 선정을 지속할 경우 부실화와 예산의 낭비라는 결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기술금융시장을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술평가에 기초한 자금조달 통로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시장접근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기술의 우수성과 경영진의 능력에 따라 자금조달이 언제나 가능한 시장구조가 형성되면, 정부부처가 다양한 이름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혁신형 중소기업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R&D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기술금융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부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역량 및 잠재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정책적 지원이 중소기업인들을 자칫 정부가 제공하는 자금, 기술, 인력확보에 치중하게 하여 자체 핵심기술개발, 경영혁신, 판로개척 등 본질적인 기업활동 능력을 상실케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직접적인 기술지원과 세제혜택, 정책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등은 기업의 R&D 역량강화 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찬디아(China+India)의 추격이 목전에 다다르고 있고, 선진 각국의 견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정책적 시행착오를 감내할 여유가 없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달성할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당국과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SDI**